

전남도,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대응 본격 추진

전라남도는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제5차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2026년 광양시 위기대응 지원사업, 순천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고 및 향후 전략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건설 경기 장기 침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이른바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단순한 단기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기준 광양 지역 철강 생산액은 4조 2천9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으며, 수출액 또한 1조 8천680억 원으로 10.1% 줄었다. 고용 지표 역시 악화해 실업률이 2.2%에서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9%까지 치솟는 등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에 2026년 총 8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전남도는 금융·재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고용 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위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재정 분야에서는 광양의 철강산업,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업종의 중소기업 9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의 융자 대출에 대해 1.5%



협의체서 전략수립 용역·광양시 지원사업 등 공유

금융·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지원에 848억

서 3.0%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이자율 우대,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증 및 보증료를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철강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 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에 21억 4천300만 원, 순천시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광양 111개 사, 순천 29개 사 이상의

철강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돕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재직자 3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급한다. 고용둔화 업종에 신규 취업한 19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타 업종에서 이·전직한 2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정착금을 지원한다. 재직자 50명에게 1인당 180만 원의 기술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AI) 실증 교육원을 운영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

작 차원에서 200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9천 개소를 대상으로 총 22억 5천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해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단기 위기 극복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고부가 철강 수요 확대에 발맞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환경·첨단 철강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설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합동 점검반 편성해 3~5일 대규모점포 5곳 실시

포장 횟수·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시 여부 등 확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백화점·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대규모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명절 다 소비 품목의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점검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주류, 화장품·잡화류 등 포장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게 포장감사명령을 내려 한국

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을 제출하게 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대해 ▲분리배출 도안 표시 ▲적정 도안 사용 ▲분리배출 도안 최소크기(가로·세로 8mm) 준수 여부 ▲실질재질과 표기재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은 환경공단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부적절한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소규모 사업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돼 국비 13억... 50인 미만 중기 대상

전라남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 원을 확보,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해 예방사업을 지원한다.

이는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에는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부산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고용노동부가 재원을 부담한다.

전남도는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농총 등 노사민정협의회, 전남지역 산단·농공단지 협회와 협력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120개소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120개소 ▲밀폐공간 등 위험 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130개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9개 외국어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이동식 크레인·지게차 종사자(600명)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등

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현장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컨설팅은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총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시설물 지원은 약 130개 사업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중파와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안전 챔피언'으로 선정해 현장 참여와 자율적 안전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근한 상태로 퇴근하는 일터가 안전한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광주시, 시민 주도 '광주형 에너지 분권' 추진

올해 총 사업비 103억 투입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전기 생산·공유·자립 실현... 마을거점센터 15곳 운영

시민·주택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배란다태양광 설치 신규 도입

82억 들여 신재생에너지이용복합 1160곳 시행... 시민펀드 조성도

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가정과 상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개별 가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

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의비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발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에너지를 시민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기

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20세대 이상 참여 때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됐으나 지난해부터 10세대로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특전(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는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 때 1회당 1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해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과 연계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84곳에 태양광 설치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과 마을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81억9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영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푸성